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항락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나가쓰(長洲) 지사는 요코하마(横浜)대학교 상과대 교수 출신이다. 그는 65세의 고령임에도 무소속으로 지사 선거에 출마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당시 그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유권자를 사로잡은 공약(公約)의 힘이었다. 그 4년 뒤 나가쓰 지사는 무투표 당선이나 다름없는 재선을 일구어냈다. 그의 재선 가도에는 자민당, 사민당 등 유력 정당들이 후보자를 내지 않고 공동으로 추천하는 이례적인 현상마저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게 대세인 상황에서 정당이라고 달리 도리가 없었던 셈이다.

나가쓰 지사의 교훈

나가쓰 지사는 1978년 일본에서 '지방시대'를 처음으로 주창한 인물이다. 10년 뒤 그가 가나가와현 지사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도쿄(東京)로부터 가나가와현의 독립'이라는 기치는 중앙정부를 겨냥한

일대 사건이었다. 지방정부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시가 관행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그의 공약은 중앙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것이다. 도쿄를 '일본 내의 독립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은 정체와 낙

대통령도 안지키는 公約이라면

후를 먼저 못했던 게 일본의 현실이었다. 가나가와현도 소재지인 요코하마를 제외하고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필한 게 없었다.

'사람이 살아야 돈이 된다'는 그의 논리는 '가나가와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과학단지 유치'라는 공약으로 승화되면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도쿄에 상주하면서 주무 장관과 영향력있는 의원들을 만나 과학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다 안되면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

았다. 그 4년 뒤 가나가와현에는 첨단과학 단지가 조성되고 국내의 우수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부(富)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가쓰 지사는 지방시대, 그 운용의 주체는 지방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다.

우리에게도 16년 전부터 시작한 지방자치가 벌써 4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과연 지방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일까. 난무하는 것은 선거 이야기요, 세중시 뿐이다. 세중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원칙'과

'효율'의 상충을 이야기하고 정쟁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지방은 안중에도 없다. 행정부처 이전은 인구의 절반이, 부(富)의 85%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왜곡된 구조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로 바로 잡자는 데 있다.

한마디로 이 정부가 '효율'을 내세워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일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세중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들에 평당 40여만원에 불과한 땅값에다 각종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겠다고 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발상이다.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 대신 투자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도권 투자 규제법을 해제한 것도 이 정부의 작품이다.

세중시 피해자는 호남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의 역할은 통제와 확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선택적 분배와 투자에 있다. 그런데도 '선택과 집중'이 전가의 보도인양 지방재정이나 투자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해 집중 투자하는 현 세중시 시스템은 낙후된 호남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만 가져올 뿐이다. 결과적으로 세중시 문제를 좁히고 좁히다 보면 그 피해자는 영남도 아닌 호남으로 귀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정치권은 선거에만 혈안이 있다. 세중시 문제를 거론하는 후보자는 드물고 '어떻게 하면 지방이 먹고 살 것인가'하는 공약도 찾기 어렵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포장'해서 나오고, 베끼기식 경쟁도 치열하다. 문제는 당선된 뒤의 일이다. '대통령도 공약을 버렸는데 굳이 지킬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이 없는 노릇이다.

〈논설주간〉 hlshi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류동훈



세중시 문제가 올 설의 최대 이슈였다고 볼 수 있다. 설 민심이 소통을 하였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각각 자기 입장에서 설 민심을 바라보고 여전히 갈등의 치킨게임은 지속할 기세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국운을 키웠건만, 후손들은 세종시로 갈등하며 국운을 잡아 먹고 있다.

당초 2003년 12월 17대 국회에서 제정했던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서는 청와대와 국회, 각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는 방향으로 여야합의로 제정되

어 놓는 방법을 제안한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면 성문 헌법에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고, 청와대 국회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수도 이전의 약속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 부처가 한군데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거기다 더 보태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과학중심경제

청와대·국회도 세종시로 옮기는 개헌을

었다(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 그러나, 2004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상 수도인 서울을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은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대신 12부 4차 2청만 세종시로 옮기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통과시킨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청와대 국회 각 정부 부처가 분산되어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 야당의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는 내용

을 넣는 방법을 제안한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면 성문 헌법에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고, 청와대 국회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수도 이전의 약속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 부처가 한군데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제 종합적으로 개헌을 할 때이다. 지금의 갈등을 국가에너지 문제를 결집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바꾸어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정부조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다. 여야는 개헌안에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을 합의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이제 갈등을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합쳐 올린 할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린다.

〈행정발전소 문화도시 일자리사업단 본부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먹을거리·사교육비 등 높아지는 대학생가 '비상'

요즘 점점 높아지는 대학가 물가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도 양극화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대학 내에는 여전히 2~3천원 사이의 저렴한 학생식당들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가의 전반적으로 높아진 먹을거리 기준 자체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요즘 스펙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 비용도 크다. 사교육은 대입을 준비하는 중고등학교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가장 큰 부담중 하나이다.

한편 학원, 컴퓨터활용능력 학원, 토익 학원, 회화 학원 등은 기본이고 요즘은 마술이나 유머 학원까지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거기다가 해외연수는 한번에 몇천 만원씩 깨지는 경우인데 방학이 끝나면 서로 '이번엔 (해외연수로) 어디 다녀왔?'이 인사가 될 정도이다. 즉 해외연수 한두 번 안 다녀왔다면 이상할 정도로 일반화 돼버렸다.

대학가의 물가와 스펙용 사교육비, 이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우려스러울 정도로 비싸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주연실·광주시 동구 산수1동

기고

문병완



지금 농업·농촌의 역사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바로 농업 사업구조개편이 그것으로,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농협의 의견과 상당 부분 상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농협이 '거대한 공룡'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공(功)은 없고 과(過)만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농협의 의견이 정부와 다른 것을 두고 마치 농협이 밥그릇을 더 차지하려는 의도인 것처럼 보도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단상

그러나 지금까지 농협이 농업·농촌과 국가경제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해 왔는지, 그리고 농협이 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농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협은 1961년에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영농 지도와 농업자금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 왔고, 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인의 권익 대변에도 앞장서 왔다. 특히, 창립 초기 식량증산운동을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고, 이후 상호금융을 도입하여 농촌 고리채를 해결하였으며, 신도농민운동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협과 아울러 농촌사랑운동을 펼쳐 농민국민적인 1사1촌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등 10여년을 주기로 대대적인 운동을 펼쳐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농협은 지난 해 사업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간의 농협 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탈바꿈하고,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농업·농촌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대전제에 따라 농협은 현재의 중앙회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그리고 교육지주를 담당하는 중앙회로 분리하고, 금융지주를 먼저 분리하고, 경제사업의 자립여건이 충족되는 즉시 경제지주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자체 의견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더해 2017년까지 농협 스스로 자본금 조성을 통해 사업구조개편을 하기로 했던 것을 앞당겨서 하는 만큼 사

업구조개편에 소요되는 자본금 중 부족한 자본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며 '자율과 독립'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 지금의 중앙회 단일 법인이 세 개의 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조세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 사업합성화를 통해 벌어들이 이익을 농업·농촌에 보다 많이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보험부분의 특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을 의견에 포함하였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50년간 유지해 온 종합농협체제를 완전히 탈바꿈시킨다는 점에다 농업·농촌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여론과 당사자인 농협의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농업·농촌의 더 큰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온 국민의 마음의 뿌리인 농업·농촌에 더 큰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농협 사업구조 개편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할 일이다. <보성농협 조합장>

시설

탄소세 대비 지역 '녹색 경쟁력' 강화해야

정부가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탄소세 도입은 시·군·읍·면 단위로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행위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탄소세 도입에 대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지역 기업들의 자금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석유·화학업체가 집중돼 있어 탄소배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지역 업체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자칫 지역 총생산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면 호남권 GRDP(지역내 총생산)의 16%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인 녹

색 경쟁력 부문에서 전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기본적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도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인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검증을 받은 기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탄소세 도입과 맞물려 추진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유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에 분사가 있는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3년간 시범거래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부산 유치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탄소세 부담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마저 무산된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탄소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에도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실적 올리려 힘없는 서민 '범죄자'로 몰다니

경찰이 지난해 7월 지구대 경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지역경찰 성과 관리제'가 무차별 입건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훈방이나 계도 조치에 머물 경미한 사안까지 마구잡이로 입건해 특히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범죄자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찰 성과 관리제'는 강·절도범 등 법인 검거 활동을 점수로 환산해 인사고과뿐만 아니라 성과급에 반영하며 포상금과 특전 등의 혜택도 부여하는 제도다.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내태한 지구대원들의 근무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이 승진 등을 위해 힘없는 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또 지구대는 매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위 고객관리실에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대형마트 직원을 입건했다. 심지어 손님 손에 국물을

쏟은 식당 종업원이 체포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무차별적인 검거는 각 경찰서별, 업무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등 지나치게 실적이 강조된 결과다. 불법행위 근절이 아닌 본질적인 면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엽적인 단속건수 늘리기에만 치중된 것이다. 특히 배정 기준도 타당공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순 절도 혐의로 한 명을 입건할 경우 10점을 받는데, 3명만 입건해도 살인 피의자 1명을 검거(25점)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다. 경찰관들이 실적 올리기 쉬운 단순 절도 사건에 매달리는 이유다.

법인 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범죄 예방을 위한 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또 지구대는 매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위 고객관리실에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대형마트 직원을 입건했다. 심지어 손님 손에 국물을

無等鼓

'우리들은 저녁밥을 일찍 먹고 나니 배가 고프고 이삼점을 꾸렸다. 겨울이 대부분이었던 요즘은 자연과의 소통을 찾는 생태적 귀농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귀농·귀촌(歸農·歸村)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귀

농 인구가 증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생계형 귀농이 대부분이었던 요즘은 자연과의 소통을 찾는 생태적 귀농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진군의 경우 귀농 가구가 4년 만에 50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2006년 2지구에 불과하던 귀농 가구가

귀촌(歸村)



2008년에 65가구(160명)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01가구(275명)로 세자리수를 돌파했다. 충청남도의 지난 해 전체 귀농 인구가 305명인데 비하면 다각적인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농촌에서의 삶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해도 최소한의 소득과 교육·문화적인 제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착이 쉽지 않다. 시행 나날 수 있다는 믿음이 농촌 탈출을 부채질한 셈이다.

최근 귀농·귀촌(歸農·歸村)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귀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URL.